

함께 돌봄이 존중되기 위한 시작

백선희 소장

우리는 태어나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살아가면서 질병과 장애로 심신이 불편할 때, 그리고 노인이 되어감에 따라 누군가의 ‘돌봄(care)’을 받게 된다.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았던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돌보기도 하는데, 이러한 돌봄의 관계는 인간의 본질적이며, 보편적인 윤리라고 Kittay(2006)는 말한다. 이렇게 돌봄윤리에서 정의하는 인간됨의 의미는 정치공동체에서 기대하는 시민 상하고도 관련되는데 이것은 바로 타인의 돌봄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돌봄 의무를 외면하지 않는 ‘돌봄인’이다(김희강, 2016).¹⁾

정부에서는 ‘포용국가 아동정책’(관계부처합동, 2019. 5. 23)을 발표하고,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4개 영역 14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아동권리 보장 및 안전한 돌봄 강화, 생애 초기부터 촘촘하게 돌보는 아동 건강, 창의성·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 혁신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안전한 돌봄을 위한 방안으로 가정 내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간제보육 확대와 공동육아 활성화를 제시하며, 초등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돌봄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역별 아동돌봄계획 수립·시행을 제안하고 있다. 전 사회가 돌봄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공유하는 열망을 반영하고자 한 노력이라 보여진다.

본 여름호에서는 아동 돌봄에 대한 부분을 공공 부문과 사적 부문으로 구분하여, 아이돌봄서비스와 민간 육아도우미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조사 결과, 일하는 여성가구와 영아양육가구의 돌봄에 대한 요구는 매우 크고, 그에 따라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적 영역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의 어려움과 서비스의 질적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남은 과제로 보인다. 또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기관을 이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돌봄시간의 공백 해소를 위해 사적비용을 지불해 민간 육아도우미를 병행해 사용하는 현상들도 지적되었다.

1) 김희강(2016). 돌봄국가: 복지국가의 새로운 지평. 정부학연구 22(1), 5-30.

무엇보다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 주체의(그것이 공적 영역이든 사적 영역이든) 자격관리와 인증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보미에 대한 양성과정 강화를 준비하고 있어, 이에 맞춰 민간 육아도우미의 질 관리를 위해서도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회에서 돌봄을 누리는 수혜자들에 비해 돌봄 제공자들의 위상이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돌봄공동체의 민주주의적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 자격관리와 교육 강화, 그리고 돌봄 제공자들에 대한 처우와 복지 등에 대한 고민도 함께 가져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함께 돌보는 사회로 나아가길 희망해 본다.